

“대형마트 中企입점·납품비율 30% 맞춰라”

대구시, 알고나 하는 소리?

대구시가 대형마트와 대구시의 상생방안으로 올해 초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입점 비율 확대' 안이 무리수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15일 이마트, 홈플러스, 홈에버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지역 경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받았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대구시의 기대치와 맞지 않아 대구시는 대형마트에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 이달 안에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대형마트에 대한 대구시의 요구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 업체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납품 업체 비중도 이같은 수준으로 높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형마트측은 물론 로드

“재고부담 떠 안을 지역업체 몇개나”

공무원들 조차도 “현실 너무 모른다”

맵 작성을 요구한 대구시 공무원 조차 지역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인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물량 조달 능력이 있는 업체는 이미 대형마트에 입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 중 수십개의 대형마트에 물량을 공급하고 또 재고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규모력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 이것이 대구시 제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상

생안 로드맵을 요구한 대구시의 담당 부서는 중소기업이 대형마트 납품을 위해 얼마만큼의 물량을 생산하고 자본력을 갖춰야 납품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측도 물량과 자본력이 없는 기업이 대형마트에 물량을 납품한다고 모두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모 업체의 경우 대형마트에 물량을 납품했으나 재고부담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도산 위험까지 처하고 있

다는 게 대형마트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몇개의 매장에만 물건을 들어 놓을 경우도 문제다. 소규모로 물량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수십개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동종업체에 비해 대량공급에 따른 단가 인하요인이 적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유통업의 생리다.

지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구시의 중소기업 납품 확대요구에 대해 경북도를 예로 들면서 “도의 경우 도내 우수 농산물 업체를 발굴해 대형마트에 소개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납품업체 비율만 높여달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윤정혜기자 jih@idaegu.co.kr